

학생선수 징계정보 구축 및 운영 방안

< 추진배경 >

○ (대책수립)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

※ 문화체육관광부, 교육부, 대한체육회, 스포츠윤리센터, 한국프로스포츠협회,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6개 기관·단체가 합동 수립(2021. 2. 24.)

○ (법령개정)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등 일부개정(시행일: 2022. 8. 11.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(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① 개인정보 및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 수집범위

○ (수집범위) 법 시행일(‘22.8.11.) 이후 신고접수*된 학생선수 처분조치

* 학교에 신고·접수된 학교폭력 사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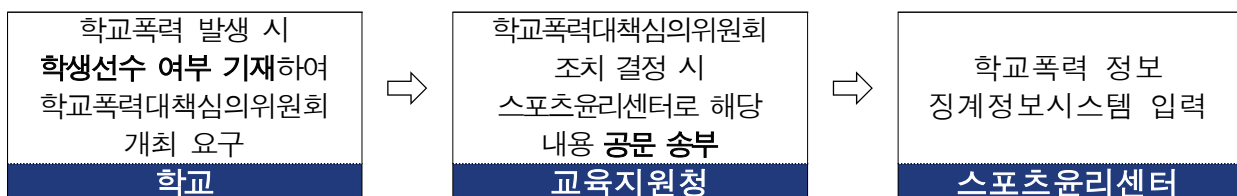
개인 정보	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 학교, 학년
학교폭력 정보	심의기관, 조치내용(조치유형, 결정일자)

※ 교육부-문화부-윤리센터 업무협약(‘22.1~7월, 총 4회)을 통해, 학교폭력 처분조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(‘22.8.11.)에 따라 채용 시 징계이력 확인이 새롭게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폭조치부터 정보수집하는 것으로 협의

○ (행정절차) 엑셀 양식(별첨)으로 학생선수 처분조치 회신 및 정보 수집

②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 수집절차

○ (수집절차) 학교→교육지원청→스포츠윤리센터(법 제18조의13 업무 위탁기관)



- (행정절차)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시 학생선수 여부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변경 및 안내

* 「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」 [부록1] 각종양식 등

- 법 시행일('22.8.11.) 즉시 업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 안내문 배포 및 지속적 교육·홍보

학교폭력 정보 수집 안내(교육지원청)	
- 학교폭력 정보 수집 목적·절차·범위 등	- 수집 양식(엑셀/별첨)
※ 협조 요청 공문의 각 교육청·교육지원청·학교 하달 및 최초 안내 후 담당자 교체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공문 시행	

- ※ (참고) 교육지원청이 정보 주체 별도 동의 없이, 윤리센터로 직접 개인·징계정보를 송부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

관련 법률자문
○ 윤리센터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) 및 제3호(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)에 따라 당사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제공 동의 없이 징계정보를 수집 가능
○ 또한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4조 제③항 제2호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자료의 요청 업무를 위탁받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정보를 회보받을 수 있음.
○ (유사사례) 문체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명의로 직접 이루어지고 있음.

③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 보유기간

- (보유기간) 관계기관(교육부·체육계 등) 징계정보 10년 보유

관련 근거	참고 사항
- 「국가기록원고시」 및 「공공기록물관리법」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10년	- 학폭법상 가해 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의 최장 제재기간 10년
- 「국방 인사관리 훈령」에 따라 국방부 징계기록의 최장 말소기간 9년 (강등)	- 「청소년성보호법」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취업제한 명령
- 「공공기록물법」 [별표1]에 따라, 10년 - 3.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만·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,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로 해석	- (법률자문) 「공공기록물법」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보존기간을 1년부터 영구까지 정하고 있으며, 별도로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기에, 센터에 그 재량권이 있음. 특히 교육부의 학교폭력 관련 정보의 관리기간을 10년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는 실무례에 비추어보면 이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

관련 법률자문
○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, 「국방인사관리 훈령」에 따라 교육부 및 국군체육부대의 징계기록은 일정 시기 이후 삭제되나, 이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녀 내부적 구속력만을 가지므로 센터는 원기록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징계정보를 보유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「공공기록물 관리법」에 따른 센터의 재량적인 보유기간 설정 가능함

- 보유기간 경과 후 센터 징계정보시스템 기록 자동 삭제

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(법률 제18760호, 2022.1.18. 일부개정, 2022.8.11. 시행)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	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-----(「학교체육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 이하-----선수(「학교체육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, -----정보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를-----.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(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② -----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체육단체-----자 는-----.
③ 체육회등의 장(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은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.	③ 변동 없음
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	④ -----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-----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에게-----.
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,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	⑤ 변동 없음

국민체육진흥법(법률 제17580호, 2020.12.8. 일부개정, 2021.6.9. 시행)

- 제55조(과태료)**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0. 8. 18., 2020. 12. 8.> ...중략..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516호, 2021.3.2. 개정·시행)

제44조(권한의 위탁 등) ...중략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(이하 “스포츠윤리센터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 ...중략
2.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자료의 요청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(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, 2021.2.19. 개정·시행)

- 제30조의5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(이하 “징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징계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